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務 韓國漁港協會
편집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인쇄인 金在克 TEL. 3673-2851~4
ISSN 1227-7053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月刊) 第120號

THE FISHING PORT NEWS

1997年 12月 25日(木曜日) (1)

어촌종합개발 21개권역 본격화 내년 15개권역 관광시설등 착수

나머지 6개권역은 '99년도 이후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을 비롯한 전국 21개 권역에 내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펼쳐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기 위해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을 비롯 전국 21개 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들 21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 타당성조사작업을 최근 마무리 했으며 시·도 관

계관회의를 거쳐 이중 15개 권역을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6개 권역은 오는 99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으로는 강원도의 경우 양양군 강현면등 2개 권역이 포함됐으며 △충남 1개 권역 △전북 1개 권역 △전남 7개 권역 △경북 3개 권역 △경남 5개 권역 △제주 2개 권역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지역에 권역별로 2개년간 35억원씩을 각각 지원해 어선계류시설과 해안시설, 어촌환경시

설, 유통가공시설, 어촌관광개발시설, 복지시설, 수산지원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국 연안의 어촌을 모두 2백25개 권역으로 나눠 올부터 오는 2011년까지 펼쳐지는 것으로 올해 마무리될 17개 권역과 내년에 15개 권역 등 오는 2001년까지 우선 75개 권역이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어촌종합개발과는 별도로 환경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정돈된 어촌건설을 수립해 나

가기로 하고 어촌생활환경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9년부터는 대대적인 어촌환경정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어항공사 지도 감독기능 강화키로

해양수산부 어항공사 관계관 회의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어항공사 관계관회의를 개최하고 97년도 어항건설공사 추진에 대한 점검 및 98년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와 어항개발 관리에 따른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어항담당공사와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어항시설사업과 관련, 기본시설 조기완성 및 노후 취약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어항기능을 제고하고, 어항 어

촌을 연계 개발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계속시공행은 집중투자로 조기완공을 촉진하고 태풍진로권 어항은 조기발주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부실요인을 사전도출하여 개선하는 등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부실시공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어항공사 관계관에게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IMF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국치니, 경제실태통치니 하는 지극히 수모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다.

물론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호기에 가득 차있던 이 나라가 어이없게도 하루 아침에 경제파국과 국가부도를 맞게된 작금의 현실앞에서 이러한 표현이 어찌면 오히려 더욱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힘 빠지는 목소리가 힘차게 움직여야 할 우리의 산업을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한해를 곰곰히 되새겨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해야 할 지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와 IMF 구제금융 문제로 인하여 그 빛이 크게 가려지고 말았지만 지난 185회 정기국회에서 어항법이 개정됐다. 그 내용은 일부 보도가 되었지만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어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좀더 침언하자면 어항을 어촌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핵이 될 수 있도록 어항 기능에 수산물 유통시설을 추가하고, 어촌생활환경의 개선과 어촌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복지시설 및 관광휴식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마련될 각종 시행령에 따라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될 것이지만 이번 어항법 개정은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항발전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양산업이라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온 수산부문이 보다 활성화 됨으로써 현재 겪고 있는 IMF의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시작한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는 우리나라 어항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므로 적지않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지정어항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요, 이런 기본적인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의

어항산업은 뒷걸음질 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IMF의 진단 결과 드러났지만 우리의 산업구조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허우대만 커다란 데서 항상 문제점이 발생돼 왔는데 이제는 어항산업 곳곳을 뒤져 한 번쯤 이를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또한 어항관련기구가 개편돼 어항사무소가 지방청으로 흡수되게 된 데 대한 문제점도 새해엔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들어 오히려 움직임을 키워 나가는 것이 IMF 체제하에서 적절한 방향인가 재삼 음미해 봐야 할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올 한해 어항산업과 관련하여 눈에 띄게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다면 제1차 한·일어항기술교류회의 개최와 어항청소선 등 정부용역사업 수행, 그리고 새청사 확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항산업과 관련, 솔직히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일본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며 기술을 서로 공유하도록 합의를 이룬 것은 앞으로 어항기술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확인한다.

또한 숙원이던 한국어항협회 청사를 원남동 소재 전 국립수산물검사소 자리에 마련하게 됨으로써 협회의 위상제고와 함께 가뜩이나 어려웠던 협회의 운영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된 것도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모두들 예상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흑심한 고통의 한해가 될 것임은 대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일을 정치권이나 경제계가 잘못 했다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관리부족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각자 모두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뿐이다. 지금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그 기간도 2배, 3배가 짧아질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각자가 열심히 해야 이길 수 있다

대포항 현 규모의 10배 확장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

동해안의 대표적 관광어항인 속초 대포항이 문화 관광휴게시설을 갖춘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속초시 대포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현재 대포항의 10배에 이르는 수역면적 17만㎡ 규모의 새로운 어항을 조성하는 대포항 정비계획조사용역 내용을 밝혔다.

지난 71년 제1종어항으로 지정된 대포항은 어항이면서 연간 7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설악권의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선증가와 도시발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이 때문에 어선접안시설이 포화상태인데다 물양장 도로 등 어항으로서의 기본시설이 절대 부족해 정비 필요성이 높게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총 4백95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의 어항을 비롯 인근수역의 매립을 통해 8만㎡의 부지를 조성하고 동방파제 7백50m와 남방파제 2백20m를 새로 축조해 대포항을 현재의 10배 이상 크기로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시설로는 7백40m의 물양장을 비롯 위판 및 활어보관시설 공동창고 냉동냉장

시설 어구건조장 어민복지회관 선양장 어선건조 및 수리장 폐유저장시설 등이 설치돼 어업근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또한 속초시와 수협 등의 민자투자로 주차장과 진입도로 수산물시장 횡집 관광휴게시설 등 관광 유통에 필요한 여건과 시설이 확보되며 이밖에 체육시설과 전시관 공원 광장 해양체험공간의 등도 정비계획에 포함돼 명실상부한 관광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9년에 착공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8~1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착공)이 당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SOC민자사업의 추진이 더욱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이에대해 재경원등 정부도 이해를 같이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의문에 따르면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98년 민자유치기본계획'에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시의 총사업비와 시설준공시의 총사업비 등 사용료의 변경수준을 명확히 기술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C 민자 활성화 절실 '유인책' 등 정부에 건의

IMF한파의 영향으로 몇 년동안 민자유치사업의 위축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정부 건의를 통해 "IMF 관리경제 시대에 SOC확충을 미룰 경우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은 물론 경쟁력 향상에도 장애가 된다"며 "정부는 SOC투자 위축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민자유치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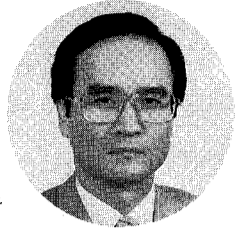
대한상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간의 위험분담수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수익성을 보다 높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관련 규제들을 시급히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재계의 건의는 지난 94년 이래 정부가 추진해 온 40개 총 36조원에 이르는 민자사업의 추진실적(현 3개

동

정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



趙正濟 해양수산부장관

▲조정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12일 해양수산공직자 가족 및 해양수산부 산하 업·단체에 친서를 보내고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 16일에는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에서 개최된 해양문화재단 설립 현판식에 참석, 20일에는 고려대학교 고위자연자원정책과정에서 강연.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12월5일 협회회의실에서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실적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확정.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2월12일 부산 제5부두에서 열린 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 취항 기념식에 참석.

▲안성봉 한국어선협회장은

12월12일 부산 제5부두에서 열린 어업지도선 무궁화20호 취항 기념식에 참석.

▲최상욱 남화도건주식회사 회장은 12월4일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10일에는 21세기 발전협의회 98년도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 12일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남지회 간담회에 참석, 13일에는 유네스코 광주전남협의회 창립32주년 국제가족친선의발행사에 참석, 17일에는 국제인권운동 한국연맹광주전남지부 간담회에 참석, 23일에는 광주지방방법원 가사조정위원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2월3일 21세기 경영인클럽 및 한국지역정책연구원 간담회에 참석, 9일에는 세계경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원회의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2월10일 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에 참석, 13일에는 광주방송문화재단 이사회에 참석, 20일에는 광주시 쌍촌동 소재 송원마트 개장식을 거행, 23일에는 광주지방방법원 가사조정위원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2월16일 삼천포 공사현장에 출장.



한국어합협회는 12월 5일 협회회의실에서 제16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장은 12월11일 나주 영산교 시설공사현장에 출장.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3일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 5일에는 광양항 제1단계 컨테이너부두 준공식에 참석, 9일에는 2010 해양엑스포 전남유치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 1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 22일에는 건설산업연구원 및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24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를 개최.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12일 진도 공사현장에 출장.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3일 한국지역정책연구원 간담회에 참석, 1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 19일에는 컨벤션센터 이사회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2월16일 삼천포 공사현장에 출장.

양정책실 정책총괄과 이희영 △"안전정책과 기근도 △항만정책국 항만운영과 장성식 △수산정책국 수산가공과 문철수 △어촌개발국 어항개발과 정진혁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김영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윤석홍 △"평택출장소장 조자환 △"인천항건설사무소 조사시험과 조사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 최순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천출장소장 이홍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이정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손창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최경욱 △"해무과장 박재호 △해양수산부 근무 우동식 △"김윤호 △"손현규 <11월27일자> □사무관 인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실 최규환 △"강호권 △국립수산물검사소 포장지소장 양금철 △어촌개발국 어촌계획과 신순균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제13호 선장 임영관 <12월10일자>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철성 <12월15일>

청사)로 청사를 이전했다. 전화번호 : 대표전화 3673-2851 ~ 4, 회장실 568-6651, 임원실 568-6652, FAX 568-6653.

당 신

▲웅진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홍성용

주소 변경

▲주식회사전일엔지니어링은 12월6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44번지 한강빌딩 8층으로 사무실 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는 전과 동일.

▲이동원씨(해양수산부 신항만기획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6-15번지로 주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0343) 714-0126.

의 비 남 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재철)

▲호흥공영주식회사(사장 박규언)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임상봉)

■개인

▲이종휘씨(전 수산청 차장)

▲서기덕씨(전 대건중기 대표)

▲구분수씨(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과장)

인 사

▲해양수산부 인사 □서기관 전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정병표 □사무관 전보 △차관실 오광석 △감사관실 최익영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실 이상일 △"전산통계담당관실 이병주 △해

정 시 이 전

▲한국어합협회는 지난 12월 22일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전 국립수산물검사소

SOC 민자사업 지연

IMF경제난 여파 사업계획 조정

경인운하건설과 대구~대동간 고속도로건설사업 등이달중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예정이던 SOC민자유치사업의 착공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철도 등이달중 사업기본계획고시가 예상되는 민자유치사업의 계획고시 시기도 조정되는 한편 앞으로 민자유치 대상사업도 3천억원이하의 중소형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회가 최근 개최한

SOC민자사업 대토론회에서 건설교통부는 주제발표를 통해 IMF지원에 따라 사업축소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SOC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정부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사의 착공과 고시시기 조정 등 사업추진의 완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 시행

자가 지정돼 공사중이거나 곧 착공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 있는 사업은 사업자 선정후 실시계획 승인시 기업의 자금조달 여력 등을 감안해 착공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중인 민자대상사업은 경제여건을 감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시기 등을 조정 검토하는 한편 내년도 민자

유치 대상사업은 사업자체의 수익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시설 설계기준 개정기로 耐震개념등 포함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공사중 방파제 보강공사나 항만부지 매립공사 등은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비 5백억원 이상인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책임감리대상 항만공사시행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면책임감리대상 제외공사를 조만간 확정하기로 하는 한편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내달중 개정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항만시설공사중 방파제공사나 항만부지매립 등 단순 매립공사도 공사규모에 따라 책임감리대상공사이면 모두 책임감리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이들 항만공사는 책임감리시행 대상공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 책임감리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

렴중이며 이르면 연내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항만공사규모는 현행대로 2백억원 이상인 공사는 설계자문에 의해 별도의 설계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심도의 자체 설계자문위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자문위원회의 인원을 1백명에서 2백명으로 대폭 증원

터키 설계·입찰심의 전산화

건교부 관련요령 마련 실무교육

앞으로 터키입찰의 설계평가와 입찰방법 심의사항 등이 전산화돼 적극 활용된다.

이와함께 발주기관은 설계분야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운용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각종 설계심의 권한이 발주기관으로 이관돼 설계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심의결과 전산화 활용요령'과 '설계자문위원회 업무요령'을 발간, 이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교통부는 심의결과 전산화요령에서 터키입찰시 응찰업체의 설계평가는 물론 입찰방법 심의사항을 전산화하도록 하여 첨단설계기법 등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한 설계자문위원회 업무요령을 통해 설계 심의사항과 심의착안사항 및 운용요령을 소개하고 위원선

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용역의 기술향상 및 용역업체의 건설한 발전유도를 위해 항만기술용역의 입찰방법심정 및 낙찰자결정 등을 상세히 규정할 기술용역관리 지침과 시공평가대상을 10억원 이상공사에서 50억원 이상공사로 상향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시공평가규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의 경우 설계분야 특성에 따라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난 73년부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운용해오던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적정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 일반설계 심의사항을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경우 중앙위원회 심의를 면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투자기관 등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자체적으로 설계 심의를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공사에 대해서만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했다.

건교부관계자는 "각종 심의의 발주기관 이관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발주기관 운영실태 및 심의결과 이행에 대한 현장점검 위주로 운영하여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위기타개' 대책 분주

선금급제도 활성화 등 현안 해결 촉구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성장률의 축소와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건설업계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건설업계는 업체들의 부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업계와의 만남을 통해 제시되는 현안사항들을 시급히 정책에 반영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업계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이같이 건설업계와의 만남을 갖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지원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로 축소되고 정부재정도 10% 가까이 감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돼 건설업체의 부도증가 등 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지원대책을 마련,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업계는 올해 6%를 넘어선 건설업체 부도율이 내년에는 10%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만이 업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계의 숙원이었던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선금급제도의 활성화, 임대주택사업자 범위확대, 대형건설업체의 전문화 지원, 차액보증금의 전액반환 등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요망하고 있다.

어항 청소 올해 50만1,420kg 수거

시·군 수협 등 협조체제 구축, 청소업무 궤도에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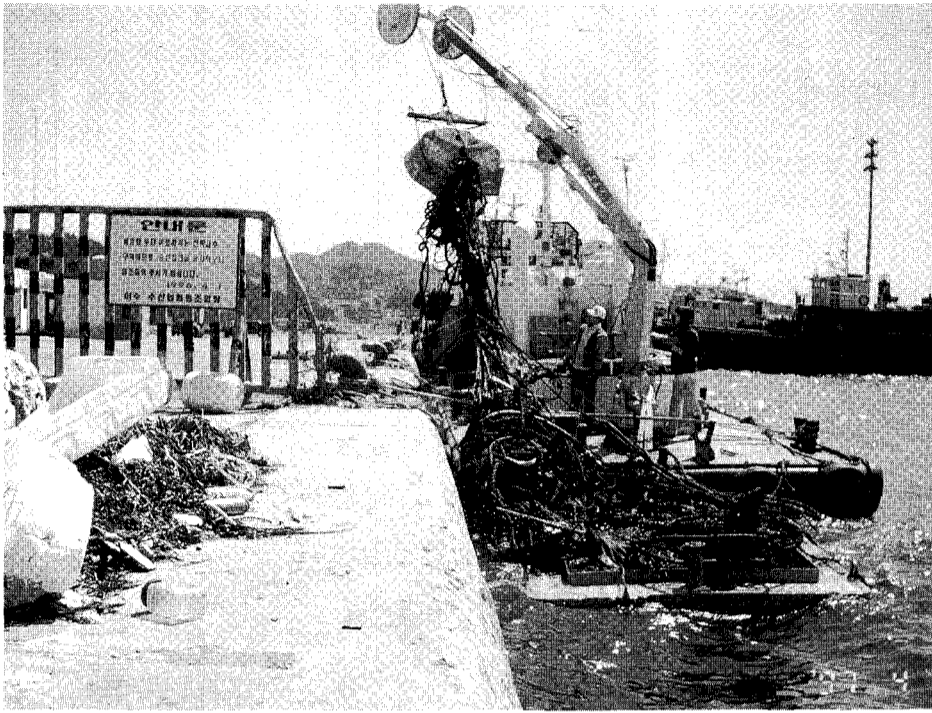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 한해동안 50만1천4백20kg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협회가 그 동안 효율적인 어항청소를 위해 전국 연안 시·군 및 일선수협과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어항청소업무는 이제 궤도에 올랐으며, 어항환경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어업인들의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의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 앞으로 현지 어항청소선 승선원과 협회 홍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 한해동안 어항청소선별 청소실적은 다음과 같다.

- △어항901호(군산 소재) : 4만3천3백40kg
- △어항902호(목포 소재) : 4만1천2백kg
- △어항903호(고흥 소재) : 6만7천7백30kg
- △어항904호(여수 소재) : 9만8백50kg



■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 한해동안 50만1천4백20kg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 △어항905호(통영 소재) : 5만8천kg
- △어항906호(포항 소재) : 9만7천kg
- △어항907호(주문진 소재) : 10만3천3백kg 등이다.

항만개발 기본계획 재검토

여건변화 반영 등 기능을 제고

정부는 적절한 항만기능제고와 지역특색에 맞는 항만개발을 적극 유도키 위해 전국 주요 항만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의 항만여건변화를 기본계획에 반영, 체계적인 항만개발을 유도키 위해 지난 95년에 고시한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전국항만기본계획 재검토를 맡을 실무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타당성조사작업에 들어가 재검토대상 항만을 선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재검토대상 항만이 선정되는 대로 연도별 재정비 항만을 정해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재검토 대상은 지난 95년에 일괄적으로 고시한 45개 항만중 개별항의 기본계획수립이 오래돼 최근의 주변여건과 크게 동떨어지거나 물동량변화가 뚜렷한 항만을 우선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재정비작업에서 최근의 항만여건변화에 따른 면밀한 항만수요예측을 통해 항만운영체제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항만시설 배치 및 선석추가확충계획 등 장기항만개발계획 등도 재검토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최근들어 물류비 급증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물류시설중심의 항만개발계획추진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용역비 내년 현실화

건설교통부는 선진외국에 비해 평균 80%선에 머물고

있는 설계용역비를 외국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설계용역결과에 의해 산정된 공사비와 추정공사비를 연계해 설계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신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적절한 설계비의 보장을 통한 부실설계방지를 위해 현재 선진외국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있는 용역설계비를 내년부터 외국수준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내 설계용역비는 1억원 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10.55%로 선진외국의 12.01%에 비해 88%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억원 공사는 6.16%로 외국의 8.46%의 73%에 그치고 있다.

또 1백억원공사는 5.22%로 6.45%의 선진외국에 비해 81%수준이며 1천억원 공사는 4.85%로 외국의 5.25%에 크게 미치지 못하

21개 전용부두 민간에 매각 民有民營 전환 법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울산항의 한라시멘트부두 등 21개 전용부두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그동안 항만시설은 민간이 건설하더라도 기부채납형식을 통해 모두 국가소유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운영하는 전용부두를 가급적 민간에 매각, 소유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울산항의 한라시멘트 부두를 비롯 광양항의 포철원료부두, 마산항의 삼정중공업부두 등 21개 전용부두를 매각대상부두로 검토중이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년 상반기중 항만법을 개정, 민간인이 부두 등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는 법

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전용항만 중 △돌핀과 같이 안벽에 비해 전용성이 강한 항만시설 △유상사용중이거나 무상사용 잔여기간이 짧은 항만시설 △컨베이어가 설치된 광양항 포철원료부두처럼 타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항만시설 등을 우선 매각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이처럼 전용항만을 민간에 매각, 민간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이른바 민유민영(民有民營)체제로 전환키로 한 것은 사실상 민간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국가가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고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수준의 국내 설계용역비를 선진외국에 맞춰 나가기 위해 용역결과에 의한 공사비와 추정공사비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설계용역비를 실제공사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신속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는 각 발주기관이 설계비 계상의 기초가 되는 추정

공사비를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설계비가 부족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또 합리적인 적산기준을 마련해 추정공비가 실비에 가깝게 산정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을 지도해 나가는 등 추정공사비와 실제공사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내년 건설산업 사면초가 금융대란 속에서 삼중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경제시대를 맞는 내년도 건설산업은 저성장률, 정부재정 축소,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고불가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업계는 지금 미증유의 금융대란속에서 일감의 절대적인 부족에 휩싸여 자금난과 수주난 경영난 등 가혹스러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IMF차관 양해각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의 절반수준인 3%로 대폭 낮췄고 정

부재정도 균형 내지 흑자재정을 유지토록 주문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SOC신규사업의 연기, 일반행정경비의 절감 등을 통해 내년 예산을 4조원 내외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재정축소는 경상비의 감축에 한계가 있는 만큼 9조4천억원이 배정된 농어촌 구조조정사업과 19조7천억원이 편성된 교육재정, 11조 1천억원이 계상된 SOC사업이 주요 삭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漁港協會가 원남동시대를 열었습니다



푸른 바다 —
밝은 어촌 —
활기찬 어항 —

特殊 韓 國 漁 港 協 會
法人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 110-450

전화번호 : 대표전화 3673-2851~4, 회장실 568-6651, 임원실 568-6652, FAX 568-6653



겨울철 피부관리

차고건조할때 장시간 피부노출 피해야
말초부위 혈액순환위해 국소적 운동들

◇ 겨울철 피부증상

겨울이 되면 특별한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차고 건조한 대기로 인해 피부가 트고, 거칠어지며 심하면 열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옥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사람들나 물일을 하는 사람들나 물일을 많이 하는 주부들은 매년 겨울마다 손과 발의 이같은 피부증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심하거나 악화될 때 장시간동안 추위에 피부를 노출시켰을 때 흔히 「동상」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 가장 좋은 처치법은 「습속온난 치료법」이라고 한다. 즉, 40~42℃의 온수에 손톱이 분홍색으로 될 때까지 담그는 것이다. 예전에는 급속 온난법보다 완전실온 온난법(천천히 저온에서 실온으로 이행하면서 녹여가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급속히 녹이는 편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감각이 둔화된 동상부위를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동상 현상이 없는 부위(예를 들면 팔꿈치)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미한 증상이 계속 있을 때 급성기의 「우선 큰 불을 끄는」 치료가 의사의 몫이라면 만성기의 「작은 불들은 꺼나가고 큰불을 예방하는」 치료는 환자들 각자의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모든 피부질환의 특징이 그렇듯이 겨울철 피부증상 및 질환들도 대부분 만성적이며 그래서 재발하고 잘 낫지 않으면서 특하면 악화되기도 한다. 흔히들 이럴때 하는 이야기가 「체질」 때문이라고 하는데 습진이나 아토피성피부염 등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체질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은 자외·타외적 환경 및 습관이다. 추운데서 장시간 일해야 된다는지, 물일을 많이 한다는지 했을때 누구도 동상이나 접촉성 피부염(주부습진)에 걸리게 될 것이며 같은 일이라도 일하는 습관에 따라서 경중도가 다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환경과 습관은 체질로 인한 피부질환들의 경중도를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예를들면, 한냉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너무 장시간 동안 계속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자주 쉬면서 온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한 방한 의복 및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말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말초부위의 국소적 운동(예를들면 발가락·손가락 등을 꼬지락거리며 움직이는 것)도 얼마간 도움이 된다.

끝으로 물일을 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면장갑을 낀 후 그위에 세지 않는 고무장갑을 끼어야 하며 하루의 일이 끝나면 영양크림이나 로션을 충분히 바른 후 비닐장갑을 낀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활정보

환경과 환경오염

환경이란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위를 둘러싸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을 말하며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으로 이러한 환경이 오염물질로 더럽혀지는 현상 또는 상태를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환경오염은 자연계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자연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초과할 때 나타난다.

환경오염 내지 자연파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연계의 환경용량에 비하여 그 오염행위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오염현상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그후 과학기술의 발달, 이로 인한 산업화와 공업화의 진전, 도시화, 인구의 증가 등이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가속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이 뚜렷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기름진 땅으로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어 왔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과 그로 인한 경제성장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물과 공기는 물론 땅까지도 오염되어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까지도 걱정하게 되었다.

었다.

환경오염의 원인

환경오염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공기는 주로 난방, 자동차 운행, 산업용 열공급 등 석유나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물질에 의하여 오염되며 오염물질로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먼지, 옥시탄트(Ox) 등이 있다. 물은 가정의 생활하수, 공장의 산업폐수, 농촌에서의 축산폐수나 비료·농약 등의 영농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고 산업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대기오염·수질오염·쓰레기발생 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고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을 사람이 섭취하면 피해를 입게 된다.

오염행위의 규제

가. 환경영향평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및 공

환경에 관한 법률상식

10년마다 자연보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업단지조성, 체육시설의 설치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내용을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권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승인권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 및 보완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내용을 이끌어 낸다. 이러한 협의내용은 사업승인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이행되어진다.

나. 자연환경의 보호

국가가 국토의 개발 및 이용, 기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매 10년마다 자연보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국에 걸쳐 지형·야생동식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14)

第2章 浚渫工

표 2.2.5 측량선 유도법의 비교

유도 방법	유도방법의 설명	장점	단점
○ 평행식직선유도법 측량구역에 평행선을 일정 간격으로 긋고, 이 선상에 선박을 달리게 하는 것	○ 로프·미터 세끼줄에 의하는 방법 측량정소에 측량위치를 표시한 로프 또는 미터줄을 쳐서 이에 따라 측량선을 이동한다. ○ 트랜시에 의한 방법 평행한 일직선상에 측량선을 이동하고, 이 일직선 직각방향으로 트랜시를 거치하여 측심과 동시에 기선으로부터의 각도를 읽고 선박의 위치를 아는 방법	비교적 규모가 작은 구역의 측량에 적합하다.	측선이 길어지면 오차가 크고 품이 든다.
○ 전파에 의한 방법 전파로 측량구역을 커버하여 유도하는 것	○ 트랜시에 의한 방법 해안에 A ₁ A ₂ , B ₁ B ₂ 인 일직선과 기기거치점 E를 설정한다. 측량선 S를 A ₁ A ₂ , B ₁ B ₂ 의 일직선 위를 지나가게 하고 측심과 동시에 각 α ₁ , α ₂ ...를 관측한다.	근거리용(2km 이상) 중거리용(500km까지) 원거리용(수천km까지) 등 원거리 이용이 가능. 정밀도가 높다. 야간항천에도 작업이 가능.	트랜시 측정자와 측량선 사이에 밀접한 연락이 필요. 원거리(2km 이상)는 시준이 곤란. 해상에서의 시준이 방해될 때는 이용이 곤란
○ 방사식직선유도법 측량구역의 여러점을 중심으로 방사선을 긋고, 이 선상에 선박을 달리게 하는 것	○ 광파에 의한 방법 트랜시 대신에 광파측거리를 사용하는 것	유도지점수가 적어서 좋다.	측선이 방사상이므로 유도지점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측선간 거리가 커진다.
○ 원호식곡선유도법 2측표간의 내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측량선을 달리게 한다.	○ 평행식직선유도법과 같은 기기를 사용한다.	선상에서의 사용이 적합하다. 이 때는 육상에 인원을 배치 안해도 된다.	육상에 큰 목표가 필요. 움직이면서 하는 측량은 오차가 크다. 임의의 위치측량은 쉬우나 바라는 장소로의 선박 유도는 곤란
○ 쌍곡선식곡선유도법 이미 알고있는 3지점에서 발신한 전파의 수신점까지의 도착시간차로 위치를 안다.	○ 세키스탄트에 의한 방법 선상에 있어서 다른 2측표를 측량하든가 또는 육상의 기지점에서 측량선의 방향을 측량한다.	○ 전파를 이용한다.	평행식 직선유도법의 전파에 의한 방법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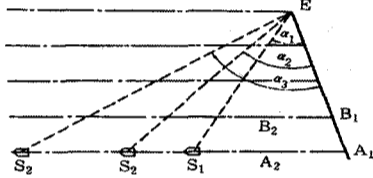


그림 2.2.3 트랜시에 의한 방법

b. 일직선을 육안에서 시준하면서 측량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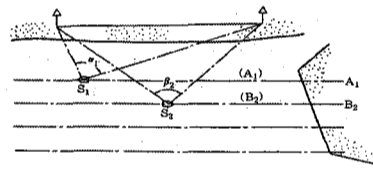


그림 2.2.4 직선유도법

치 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기계, 기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및 기계, 기구이다.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당해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 사업자가 조업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등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생활정보

다.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1) 환경기준의 설정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보전하는데 필요한 환경상의 기준이 환경기준인데 각종 오염규제시책은 환경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2) 배출허용기준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수 또는 가스 등의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최대 허용농도를 말하며 배출규제의 핵심요소로 최근 환경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